

KBA WEEKLY BRIEFING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2023.01.16 - 01.20

VOL.344

CONTENTS

I

EU TRADE POLICY

- ▶ 12.16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 ▶ 12.16 독일, 2022년 경제성장을 1.9% 증가
- ▶ 12.17 EU 집행위원장, IRA법 대응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표명
- ▶ 12.17 독일, 배터리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추가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 ▶ 12.18 인텔, 독일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예정대로 진행 중
- ▶ 12.18 쿨른경제研, IRA법에 따른 산업유출 우려 과장...독일 경제 오히려 수혜 가능
- ▶ 12.19 EU 집행위원장,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 ▶ 12.19 EU, 금주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협의 예정
- ▶ 12.20 프랑스-스페인, IRA법에 대응한 유럽 공동의 적극적 산업정책 촉구
- ▶ 12.20 EU 집행위, 친환경 리벨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친환경 표시지침' 추진

II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 ▶ 12.20 ECHA,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9종 추가

I

EU TRADE POLICY

①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 IRA법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제안

-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 보조금 규정 개정을 제안

- EU는 높은 에너지 가격 및 IRA법의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친환경 보조금제도의 영향으로 EU 기업 및 투자의 대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13일(금) 회원국 금융장관들에 전달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응한 보조금 제도 개정안을 제시, 16~17일 EU 금융장관이사회에서 이의 검토를 제안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서한에서 유럽 산업 경쟁력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미국의 IRA법으로 일부 EU 기업이 미국으로 투자를 전환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
-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로 변경할 것을 제안
- 이는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 변경을 통해 보조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지급 승인을 신속화하며, 모든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하도록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 또한 세제혜택을 통해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
- 다만, 보조금 제도 변경을 통한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투자 유출 위험이 존재하는 섹터를 대상으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시

- 또한,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여력의 차이 및 이에 따른 역내 시장왜곡 가능성 차단을 위한 EU 차원의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

- EU 회원국은 2014년 도입한 이른바 '일괄적용 면제규정(GBER)'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EU 집행위에 대한 신고 없이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 '한시적 위기 대응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통해 총 6,72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바 있음
- 다만, 6,720억 유로의 보조금 가운데 독일이 지급한 보조금이 53%, 프랑스 24%, 이탈리아 7% 등 일부 회원국에 편중된 점에서 회원국 간 불평등 및 시장왜곡 가능성을 우려
- 이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와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른바 'REPowerEU' 확대 및 EU 차원의 기금 창설 등 모든 회원국에 공정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독일은 자국민 세금이 타 회원국 지원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EU 차원의 단일 기금 조성에 부정적 입장. 다만, 최근 연립정부 가운데 사민당(SDP) 및 녹색당(Greens)은 새로운 EU 차원의 기금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한편, 프랑스는 지난 9일(월)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IRA법에 대한 EU의 대응으로 EU 역내 생산목표 확대, 보조금 규제 완화, 긴급 주권펀드 창설, 무역구제조치 강화 등을 제안

② 독일, 2022년 경제성장률 1.9% 증가

-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에 따른 내수활성화로 2022년 독일 경제가 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최대 및 세계 4위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는 작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된 바 있으나, 전년대비 4.6% 증가한 민간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GDP가 1.9%의 증가율을 기록
- 또한, 2022년 12월 물가상승률이 8.6%로 하락하며, 2022년 전체 물가상승률도 약 7.9%의 한자리수 상승률을 기록. 또한, 2023년에도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은 다양한 입법을 통해 단기간 막대한 금액을 민간경제에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
- 한편, 작년 10월 전세계 산업생산과 교역이 각각 0.6%, 1.6% 감소함에 따라 올해 수출중심의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
- 올해 독일 경제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치는 1월 25일 발표될 예정

③ EU 집행위원장, IRA법 대응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표명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추진 계획을 표명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IRA법에 따른 EU 산업 역외 유출 가능성의 우려를 지적, 이의 대응으로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을 언급
- 기후중립산업법을 통해 전략 프로젝트 공급망 전반의 투자에 초점을 두고, 특히 신규 청정기술 생산시설 허가절차 간소화와 신속화(패스트트랙) 등을 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 검토의 일환으로 '유럽주권펀드' 도입을 검토하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정기술 보조금 제도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기후중립산업법 추진 계획 발표는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한 마거릿 베스타가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 간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됨
- 베스타가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대응 목적의 현행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한시적 위기 및 (에너지·친환경)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로 변경할 것을 제안
- 다만, 16일(월) EU의 경쟁력이 보조금을 통해 확보될 수 없으며, 단일시장 분열 방지를 위해 개편되는 위기대응 긴급 보조금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 반면 브르통 집행위원은 16일(월) (중국 등) 여러 국가가 채택한 다양한 조치로 EU 산업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한시적인 이슈가 아닌 새로운 현실이라고 지적,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친환경 산업 지원은 한시적인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위기대응 보조금제도는 새로운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공정경쟁 보장과 함께 EU 단일시장의 미래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
- 한편, EU 집행위 통상총국 관계자는 16일(월) 유럽정책센터(EPC) 주최 세미나에서 IRA법의 보조금제도로 EU 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공급망 통합이 더욱 어려워지고 EU의 對중국 의존도가 지금보다 오히려 심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
- 특히, IRA법의 국내부품 사용요건, 보조금 액수, 제3국에서의 EU 산업 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이 IRA법과 관련한 EU의 가장 큰 우려라고 지적, IRA법이 EU에게 미국과 양자 간 통상관계에 부정적인 조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

④ 독일, 배터리 프로젝트에 10억 유로 추가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

- 독일 경제부는 13일(금) 'EU 공통 중요이해관계프로젝트(IPCEI)'의 배터리 관련 사업인 이른바 'EuBatIn 프로젝트'에 대해 10억 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
- 경제부는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과 제3국의 보조금 상황 등으로 최근 유럽의 배터리 에코시스템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존 배터리 관련 투자가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역내 전기차 업체에 대한 공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조금 확대의 배경으로 지적
- 로베르트 하베 경제 및 기후담당 부총리는 배터리 산업 보조금 확대가 배터리 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을 독일과 유럽에 유지 및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 보조금 확대가 미국의 IRA법에 따른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에 대응한 것임을 시사

- EuBatIn 프로젝트는 2017년 50개 기업과 12개 회원국이 참여로 발족, 역내 배터리 개발, 생산 및 재활용을 망라하는 프로젝트로 이미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은 IRA법에 대응한 추가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⑤ 인텔, 독일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예정대로 진행 중

- 펫 갤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7일(화) 다보스 포럼에서 인텔의 독일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

- 인텔은 작년 3월 총 170억 유로를 투자, 독일 마그데부르크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작년 12월 한 언론에서 인텔이 올 상반기 시설 착공을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
- 이에 대해 갤싱어 CEO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현재 독일 정부와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패키지를 협의 중이라고 언급
- 케이반 에스파자니 수석부사장도 작년 11월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30여 명의 상근 직원이 관련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예정대로 올해 중 허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다만, 높은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올해 세계 경기후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전망 등이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 프로젝트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
- 독일 정부는 인텔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를 위해 총 68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마그데부르크가 소재한 작소니-안할트 주정부도 총 5년에서 7년간 4~5억 유로를 투자, 제조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로 및 기타 인프라 정비를 약속

- EU는 현재 전세계 9% 수준인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이른바 '반도체법'을 추진 중

- 이른바 '반도체 빅쓰리(TSMC, 인텔 및 삼성)' 가운데 작년 3월 인텔이 처음으로 유럽 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 TSMC도 반도체 수요 및 정부 지원 수준을 조건으로 유럽 내 자동차용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
- 다만,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독창성(first-of-a-kind)'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럽의회는 다음 주 독창성의 정의 등 관련 내용을 표결로 확정할 예정

⑥ 쾰른경제研, IRA법에 따른 산업유출 우려 과장...독일 경제 오히려 수혜 가능

- 독일 쾰른경제연구소는 18일(수)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이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크게 과장되고 있다고 주장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IRA법 도입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전환은 보조금 등 단일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지적, IRA법에 따른 독일 및 EU 산업유출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
 - 특히, IRA법에 따른 미국의 경기 진작이 오히려 독일의 수출 증대를 초래, IRA법에 따른 일부 보조금 혜택 배제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가 오히려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IRA법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다른 EU 회원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
- 또한, 보고서는 IRA법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의 조건인 국내부품 사용요건이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으나, 해당 요건이 실제 유럽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
 - 미국에 수출되는 독일 자동차는 대체로 고급형 모델로 국내부품 사용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가격 이하의 자동차에 부여되는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 부품 등 제조시설 이전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비록 독일에서 수입되는 부품의 비중이 높아 IRA법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품 제조시설 전반을 미국에 이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유출 가능성도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
 - 특히, IRA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일 기업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독일 기업들이 IRA법을 큰 문제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
- 보고서는 IRA법에 대한 논란이 보조금 확대와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선호하는 일부가 EU 차원의 보조금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

⑦ EU 집행위원장,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 발표

- 우루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7일(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을 발표, 다음 4가지 중점 추진 계획을 제시
-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 EU의 'NextGenerationEU' 및 'REPowerEU' 계획에 따른 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소 및 (에너지) 저장 등 기후중립 산업의 급증하는 수요 대응을 위한 신속한 허가 등 규제 개선

- 이를 위해 EU의 반도체법과 유사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도입, 2030년까지 전략 섹터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특히 청정기술 제조시설에 대한 신속 및 간소한 허가 발급을 추진
- 기후중립산업법과 병행, 청정기술 관련 'EU 공통 중요 이해관계프로젝트(IPCEI)' 지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모든 회원국 및 중소기업의 간편한 접근 및 자금지원을 간소화할 예정
- 특히, 기후중립산업법은 이른바 '핵심 광물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함께 풍력, 수소 저장 및 배터리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EU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을 촉진하고, 교역상대국과 협력하여 일부 국가의 중요 광물자원 독점 상황 극복을 추진

● [청정기술 생산의 투자 및 자금지원 확대]

- 미국과 중국 등 EU 이외 국가가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에 대응, 유럽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EU 보조금 지원을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개편을 추진
- 이를 위해, 간이 세액공제 등 보조금 계산을 쉽고 단순화하며 신속한 지급 승인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또한, 역외 보조금에 따른 EU 기업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청정기술 가치사슬과 관련한 생산시설에 대한 타깃형 지원을 시행
- 다만, EU 회원국 간 재정 불균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격차 및 이로 인한 단일시장 균열 방지를 위해 중기적 계획으로 올해 예정된 EU 장기예산계획 중간검토에서 '유럽국부펀드 (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 가능성을 검토
- 다만, 유럽국부펀드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임시해법의 일환으로 지원이 절실한 곳에 대한 신속한 타깃형 지원을 검토, 이를 위해 현재 각 회원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평가작업 을 수행 중

● [기술인력 양성]

- 청정기술 전환에는 숙련된 기술 운영인력이 필수적이며, 이런 필수 숙련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규제 개편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시행

●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 글로벌 기후중립을 위한 청정기술 전환을 위해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교역을 확대
- 이의 일환으로 캐나다·영국 등과 무역협정 이행과 관련한 일부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멕시코·칠레·뉴질랜드·호주와의 무역협정을 신속하게 타결하며,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 진전에 노력. 또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관련 협의를 재개

- 특히, 청정기술 경쟁은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며, 특히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등을 활용, 중국 정부 보조금에 따른 공공조달 및 인수합병 등 시장왜곡을 차단

⑧ EU, 금주 제10차 러시아 제재안 협의 예정

● 2월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EU 집행위는 이번 주말 EU 이사회와 제10차 러시아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

- 제10차 제재안에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확대가 포함될 전망이며, 러시아 원자력 섹터에 대한 제재도 논의될 전망. 다만, 원자력 제재에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
- 또한, 작년 12월 합의된 배럴당 60달러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시행과 관련한 사항도 중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
- 제10차 제재안이 언제 최종 합의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EU 외교장관이사회는 2월 3일 예정된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및 2월 7~8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제10차 제재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

⑨ 프랑스-스페인, IRA법에 대응한 유럽 공동의 적극적 산업정책 촉구

●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유럽의 빠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

- 양국 정상은 19일(목) 양자 간 우호협력협정에 서명하며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IRA법이 유럽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했음을 강조,
- 유럽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신속하고 야심 찬 유럽산업전략 챕터과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NextGenerationEU' 기금 등 기존 정책의 신속 및 간소한 집행을 촉구
- 마크롱 대통령은 IRA법에 대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메이드인 유럽' 전략과 유럽 기업이 쉽게 이용 가능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IRA법에 대한 유럽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 산체스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IRA법과 같은 동맹국의 통상전략으로 인해 유럽이 중요한 국면에 직면했다며, 유럽 공동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

● 한편, 발디스 둠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9일(목)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정치의 시계추 방향이 전환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세계 경제 및 공급망에 손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또한, 둠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EU의 IRA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유럽 단일시장의 기초인 공정 경쟁 환경 유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보조금 규제는 한시적인 조정장치여야 한다고 강조

⑩ EU 집행위, 친환경 라벨 통한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친환경 표시지침' 추진

- EU 집행위는 기업의 근거 없는 제품 친환경 표시를 통한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친환경 표시지침(Green Claim Directive)'을 조만간 제안할 예정

- EU 집행위는 제품에 표기된 '그린', '에코' 또는 'environmentally friendly' 등 친환경 표시의 약 40%가 충분한 근거가 없는 표시에 해당하는 현실을 지적,
- 환경 라벨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및 그린워싱 방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 지침 도입을 추진
- 이를 위해 친환경 표시는 반드시 표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근거에 입각해야 하며, 회원국 정부는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친환경 표시 근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특히, 회원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규정 이행을 감독해야 하며, 불이행 기업에 대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지침 위반을 억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칙을 도입해야 함
- 도입되는 벌칙은 지침 위반의 성격과 중대성, 위반을 통해 얻는 경제적 수익 및 잠재적인 환경적 위해 등을 고려한 공통 평가 기준에 기초해야 함
- 환경시민단체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시장감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며 지침 도입을 환영, 기업의 법 위반을 억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

- 친환경 표시지침 법안은 당초 작년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 표시를 검증할 공통의 표준 방식 부재*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음

* 현재 EU에는 약 230여 개의 친환경 라벨이 존재하나, 각각의 라벨은 서로 다른 방식에 의해 측정된 것

- 집행위는 표준 환경영향평가 방식의 일환으로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PEF)* 평가방식의 적용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 PEF(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는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사용량, 독성영향 등. 제품 생애주기 전체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EU의 통합환경인증제도로, 섬유, 식품 및 포장 등 일부 섹터에 대해 적용 중
- 이와 관련, PEF 방식은 과도하게 CO₂ 배출량에 집중된 것으로, 예컨대 유리 제품의 재활용이 복수로 이루어지는 점, 원재료의 독성물질 부존재 등 유리 제품의 환경적 이점 등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일부 업계의 비판이 제기

- 이에 집행위는 기업이 환경영향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방침이며, 다만 어패럴, 해양 수산물, 인조잔디, 자른 꽃(절화), 화분 식재 식물 및 연포장(flexible packaging) 등 일부 품목에 대한 PEF 방식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기업에 환경영향평가 방식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할 경우 지침의 효과가 저하될 것이라며 우려

II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① ECHA,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9종 추가

- 유럽화학물질청(ECHA), 9 종의 물질들이 추가되어 업데이트 된 고위험성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이하 SVHC) 후보 목록*을 발표함(1월 17일). 이에 따라 고위험성우려물질로 등재된 물질은 2023년 1월 기준 총 233종(종전 224종)임. 등록된 물질 중 일부는 화학물질 그룹으로 포함되어 실제 개별 물질 수는 그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됨.
- 해당 물질 생산 및 원료 사용 업체들은 SVHC 물질에 대한 위험관리 책임이 있으며, 고객과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SVHC 물질은 추후 허가대상물질목록(REACH 부속서 XIV)에 등재될 수 있으며, 허가 물질로 지정되면, 대상 물질은 사용 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함.

[KBA Europe 홈페이지 세부내용 바로가기 \(클릭\)](#)